

전남도, 산업분야 행복시책 시행한다

산단·조선·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 구분

청년 취업 활성화·중기 안정적 인력수급

전남도는 임인년 새해 산단의 열악한 정주·근로여건 개선으로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과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산업 분야 행복시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산단·조선·기업 지원·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산단 분야는 산단근로자의 정주·근로여건 개선

과 기대되는 4개 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82개 산단 청년근로자 5,000명에게 편의 지원을 위한 교통비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산단근로자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통근전서비스 운행을 연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도 월 최대 30만 원을 보조

며, 문화·주거·복지·편의활동 지원 등을 위한 기능 복합시설을 1개소 이상 유치할 계획이다.

조선 분야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를 제때 공급토록 지원하는 4개 사업을 추진한다. 관련 사업으로 현대삼호, 대한조선 등 조선 기능인력 훈련기관에서 훈련하는 175명에게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20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3년간 보조한다. 중소 조선기업의 경우 용접·도장 등 생산공정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신규

구축에 최대 1억 원, 기존시스템 고도화에 최대 1억 7,000만 원을 준다. 도내 조선 분야 퇴직자 및 청년 구직자에게 무료로 특수용접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이들에겐 두달간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과 월 6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지원 분야에선 취업이 어려운 청년과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을 연계해 동반 성장토록 하는 3개 사업을 펼친다.

이에 따른 사업으로 지역 대학·연구기관에 구축된 인력·기술·장비 인프라를 활

용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자체 연구소가 없는 소재·부품 기업 20개 사에 연구개발비 지원 기금을 기존 5개 사에서 올해 20개 사로 늘리고, 지원액도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도내 만 18세 이상 특성화고 및 대학 청년 인제 300여 명에게 우수 중소기업 탐방 및 기업 체험, 취업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투자 역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 저감 관련 인증, 시제품 개발, 에너지 효율화 시설개선 등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시작한다. 연

40개 사, 3년간 총 120개 사를 목표로 기업당 평균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500명에게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데 각각 월 10만 원, 월 2만 5,000 원 한도로 대여비용의 5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내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한다.

달리진 산업 분야 행복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의 '기반산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달라지거나 신설된 제도와 시책에 따라 많은 기업과 도민이 수혜를 받도록 홍보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현 기자

진정한 자치분권 2.0 시대 본격 개막

주민조례발안제 참여 확대·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참여의 폭을 대폭 넓혔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

지를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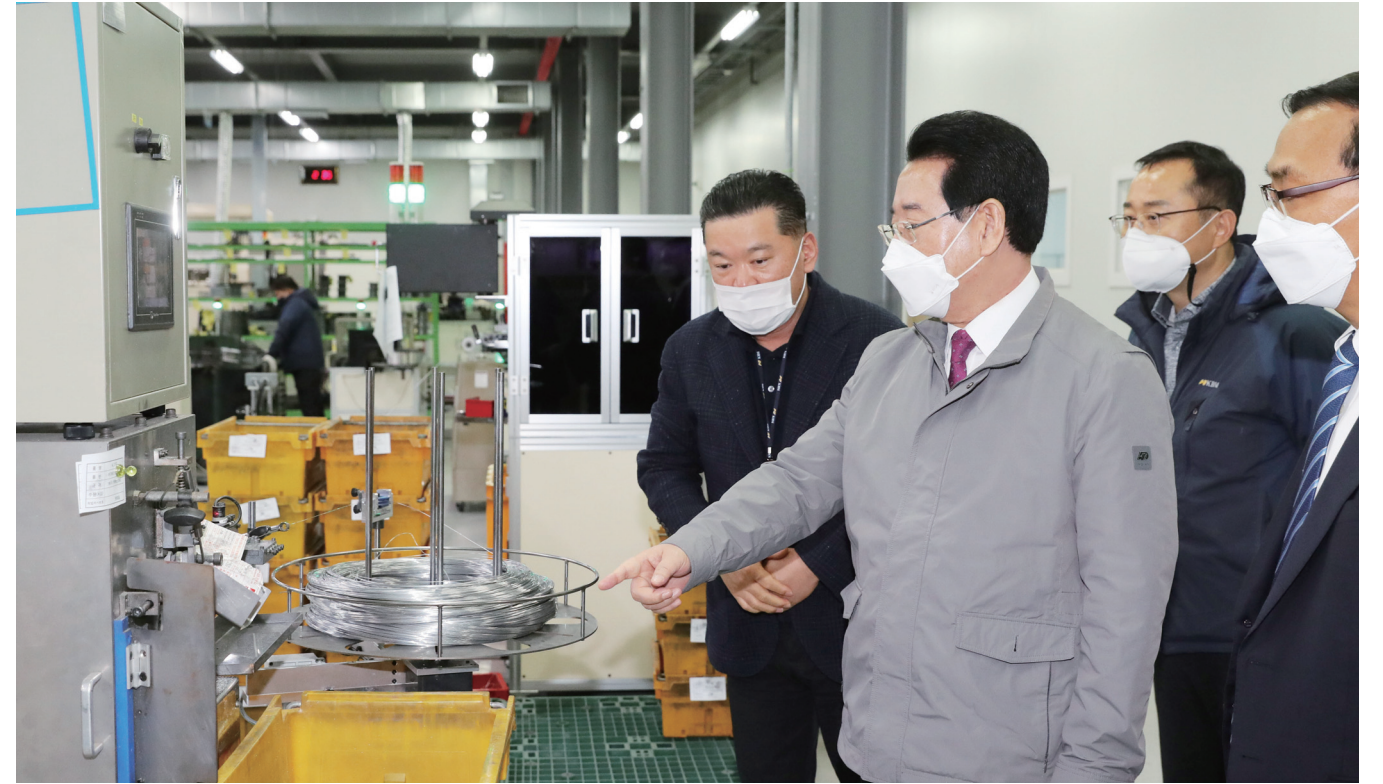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

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 운영한다.

김일웅 시자치행정국장은 "전부개정의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며 "지역의 강화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자치분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김영록 지사, 케이비엠 본사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진공중착 코일 및 반도체 히터 코일을 생산하는 나주시 케이비엠 본사를 방문, 업체현황 청취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제조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시,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극락천·서방천 수계 중심 AI 기술 접목 침수 해결

광주시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에 대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하수도를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내달 초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내용, 과업범위 등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다.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사업은 국비 265

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79억 원을 투입해 백운광장, 서서교, 신안교 주변 등 극락천 서방천 수계를 중심으로 도시침수 대응 능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하수관로 설계기준을 상회하는 강우로 인해 도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침수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스마트 기술을 연계해 근본적으로 도시의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침수 대응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수관로 수위측정과 하수량 모니터링 등 하수관로 내부의 실시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기상청의 실시간 강우량과 예상 강우량을 활용해 지역별 강우양상 분석하는 등 기후변화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침수에 대한 스마트 관리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강우 시 하수의 수리학적 특성 및 강우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 미래형 스마트 기술로 실시간 분석하고 예측해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등 침수대응 시설물 운영에 접목한다. 이를 통해 침수 발생 위험지역 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점한 시 하수관리과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분야에 스마트기술 등 4차산업 기술을 도입해 기후변화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생활밀착형 선진 하수도 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려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을 기울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한다

200명 선발...월 최대 100만원 보조

전남도는 미래농업을 이룰 농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발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 규모는 200여 명이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 ▲독립영농 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본인·직계존속세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청년층이다.

올해 선발부터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에게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선발된 청년후계농에게엔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창업자금을 3억 원 한도로 융자해준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예비·청년농업인은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영농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확정은 서면·면접평가를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또는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에 관심 있는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청년이 전남농업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 머물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현 기자

김성찬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평군수 출마 선언

"인구 증가 종합대책 수립"

김성찬(45)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평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의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시대에 맞물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융합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대학강의 활동, 경영컨설턴트, 학술연구자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함평의 현안 해결과 미래전을 구상해왔다"

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김 전 부의장은 "머물고 싶은 함평, 돌아오고 싶은 함평, 다시 찾고 싶은 함평"이라는 3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함평은 인구 3만명이 붐기될 위기로 지방소멸을 극복해나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대폭적으로 보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